

# 치솟는 기름값...서민·취약계층 겹치름

### 휘발유·경유 l당 2000원 육박 화물차·어선 운행비 절반이 기름값 농민 “영농철 농기계 돌리기 겁나” 독거노인 등 “보일러 가동 무서워”

#. 11t 화물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박중근씨는 최근 들어 운전대를 잡기가 두렵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600km 거리를 운행하는 동안 들어가는 하루 왕복 기름값만 24만 원. 일당의 절반 수준이다. 박씨는 “경유값이 l당 1900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16만원 정도면 충분했던 기름값이 24만 원까지 올랐다”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긴 했지만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데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체감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가격에 영향을 받는 업종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름에 불이 붙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치솟다 보니 생계를 위해 기름 사용이 필수적인 사람들의 경우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게 없다는 불만소리가 나온다. 유류가격에 민감한 화물, 중장비 노동자 뿐 아니라 기름으로 난방을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중장비 기사들, ‘시동 걸기 두려워’=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광주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값은 1969원, 경유 1874원으로, 전남보다 각각 18원, 15원씩 올랐다. 2개월 전인 1월 각각 1600원대와 1400원대 수준에 비해 20% 가까이 오른 셈이다.

레미콘 운전자 김광현씨는 “통상 회사에서 기름값을 지원해주는데, 요즘 기름값이 지원액(l당 1500원)을 넘어서면서 기사들이 자기 돈 내고 일을 하는 실정”이라며 “하루 100l를 쓴다면 하루 3만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레미콘 업체는 최근 광주지역 건설현장이 줄어들면서 일감도 부족 감소한데다, 유류값마저 오르

면서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레미콘 뿐 아니라 중장비 운전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박중근 광주화물연대 본부장은 “기름값이 오르면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운전자들이 많아지는 형편”이라며 “광주에서도 3곳의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중”이라고 말했다.

◇농번기철인데, ‘기계 돌리기 겁나’=나주 동강면에서 23만 1404㎡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조영민(60)씨는 할 일이 많아지는 농번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쌀값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료값, 기름값 등 부대비용만 늘어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뒀지만 “30년 넘게 해온 농사가 올해 만큼 하기 싫은 적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조씨는 “l당 700원 하던 면세경유가 어느새 1000원을 넘었다. 경운기 5대, 트랙터 3대, 야양

기 1대 등을 쓸새없이 돌리다보면 많이 쓸 때는 한달에 사용하는 기름만 5000l”라며 “기름값이 올라 비용만 한달 1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처지”라고 말했다.

어민들도 죽을 맛이다. 시중보다 40% 정도 싸게 제공되는 면세유 가격도 한달새 20% 이상 오르다보니, 배를 타고 조업을 나갈때마다 손해라는 말도 나온다. 완도군 약산면에서 15년째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차민진(51)씨는 “휘발유의 경우 100l 기준 6만원에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9만원 넘게 줘야 한다”며 “어선 2대를 모두 돌리는 게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구매할 수 있는 면세유는 제한돼 있는데다, 최근 선박 대형화로 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기름이 많아지면서 면세유를 쓰고 소비자가격으로 기름을 구입하는 어민들도 적지 않다.

◇아직 쌀쌀한데, ‘보일러 틀기 무서워’=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도 기름 값을 걱정하는 형편이다.

광주시 북구 용두동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74) 할머니는 “지난 1월 26일, 22만원을 주고 등유를 사다 보일러에 넣었는데 이달에는 25만원을 줘야겠다”며 “3만원이 올랐는데, 보일러를 예전처럼 틀 수 있겠냐”고 했다.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은 옷풍이 심해 늦봄까지 보일러 없이 잠들기 어렵다는 게 A 할머니 하소연이다.

A 할머니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초여름까지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데 기름값이 오르니 큰일”이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지낼 때도 춥지 않게 하기 위해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데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42주년 5·18기념행사위 출범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선언이 16일 오전 광주 북구 오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정동년 상임행사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 여자친구 흥기 위협·납치

### 40대 유부남 구속영장

전 여자친구를 1년 간 괴롭힌 것도 모자라 흥기로 위협, 납치까지 했던 40대 유부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흥경찰은 16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흥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A(49)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0분께 목포지역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37)씨를 흥기로 위협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2시간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년 전 B씨와 헤어지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다가 이날 렌터카를 몰고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난해 전남 노동자 산재사망 강원도 다음으로 많았다

### 지자체별 사망자 수 첫 공개

전남이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광역 지자체 중 한 곳으로 꼽혔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사고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63명(광주14명·전남4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0.72로, 강원(0.90)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남에서는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광양이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혔

고 여수(7명), 화순(4명), 순천·고흥·해남·완도(각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4명 중 6명이 광산구에서 발생, 가장 많았다. 북구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남 외에 사고사망만인율 전체 평균(0.43)보다 높은 지역은 경남(0.70), 경북(0.68), 전북(0.64), 충남(0.62), 세종(0.53), 충북(0.52), 부산(0.49), 울산(0.47), 경기(0.46), 제주(0.44) 등이었다.

지자체별 산재사고 사망자 수와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

정이 산업안전보건법(4조 2)에 마련되면서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산업 성장과 증가로 배달노동자 사망(2017년 2명 → 2018년·2019년 각 7명 → 2020년 17명 → 2021년 1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5~49인 사업장 352명, 5인 미만 사업장 318명)이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828명)의 80.9%가 나왔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전남지역의 실질적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현대산업개발 현장 12곳

###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 고용노동부 위반 636건 적발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정부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서 ‘서류 따로, 현장 따로’의 ‘삼류’ 안전 의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현장 안전관리 문제를 판단하다, 사고가 난 뒤에야 뒷북식으로 특별감독을 나서는 고용노동부의 현장감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노동부가 특별 감독을 벌여 적발한 위반사항만 636건에 이르고 사법 조치 사항도 306건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 사항도 330건에 이르면서 약 8억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갖추지 않는 위반사항이 261건에 달했다. 사전 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10건)도 적지 않았고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19건) 다수 지적됐다.

노동부는 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인건해 수사중으로,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 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관리와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을 무시한 불법적인 공사를 조장했다”면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은 결코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건설성 등록 말소 및 퇴출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 하청업체 2명 구속영장 신청

광주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하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신병 처리도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모 건설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현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업체 책임자들로, 39층 시공 방법을 무단 변경하고 하부층 동바리를 미리 철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방 법원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